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2012.12.2 (대선 보름 전)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발표

검사의 범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또 검사 편법 파견

2015년 02월 23일

국민일보

2015년 02월 23일 월요일 023면 오피니언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고질병인가

서울신문

2015년 02월 23일 월요일 031면 사설/오피니언

마이동풍 靑 비서실의 검사 편법 기용

朝鮮日報

2015년 02월 24일 화요일 A31면 오피니언

검사 靑에 품수 파견, 公約 파기 사과부터 해야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고 한다. 그는 앞서 지난 17일 사표를 내 현직 검사의 신분을 벗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각각 근무했던 평검사 2명도 이번에 사표를 내고 전직(前職) 검사 신분이 된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현 정부

있는 전직 검사 중에 적임자를 뽑으면 된다. 굳이 편법을 써 가며 꼭 현직 검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에는 검찰 외에 정부 각 부처에 전근무를 한다. 그런데도 유독 검사에 한해서는 현직 검사 파견이 검찰 중립성을

동양일보

2015년 02월 24일 화요일 034면 사설/칼럼

또 편법 인사 한 청·검,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 있다

(靑·檢)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완칙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자 '사표→파견→신규 임용 형식의 검찰 복귀'라는 골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이었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현 정부는 벌써 14명의 검사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또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원운 관계 속에 '여담 내의 여담'으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으로 임명된 검사는 우병

청와대-법무부 검찰국

東亞日報

2015년 01월 30일 금요일 A31면 오피니언

청와대는 현직 검사 차출 안 하겠다는 약속 지키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를 공약했다. 이 공약은 취임과 동시에 깨졌다.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이던 이중희 부산지검 2차장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때 신현수 사정비서관이 복귀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였다. 과거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청와대와 검찰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 내 선두주자들이 주로 발탁되고 복귀하면 검찰 요직을 맡았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

靑 민정비서관 또 '검사 편법 파견'

2015년 02월 24일 화요일 A31면 오

편법 파견에 TK 독식, 이려고 검찰 중립 말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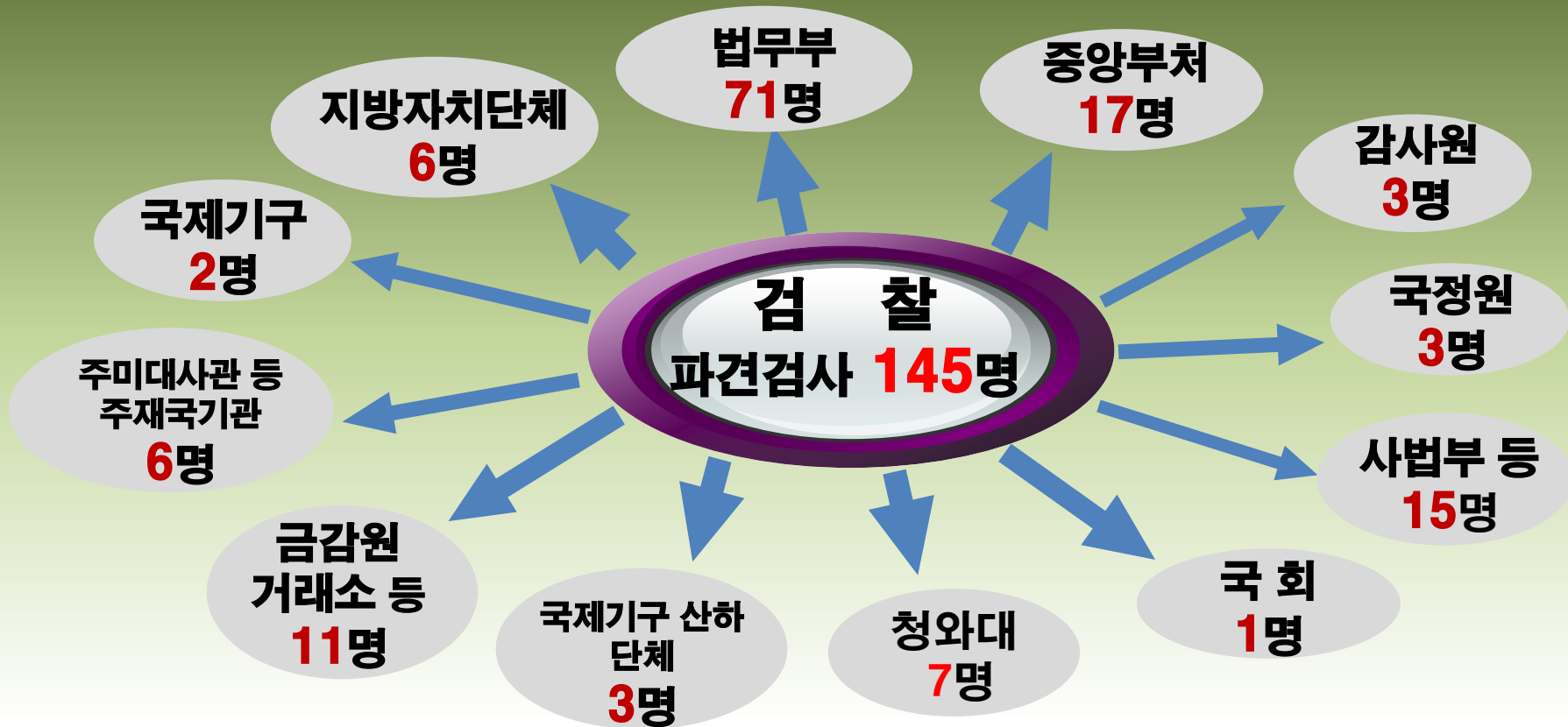
보수언론 조차...

“검사 탈법파견은 문제”

최근 5년간 감사의 청와대등 파견현황

연도 \ 파견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청와대	5	6	5	6	6	8	7
국무조정실	1	1	1	1	2	2	3
법무부	70	70	71	70	70	70	71
국가정보원	3	3	3	4	5	3	3
기타기관	60	63	67	55	56	63	61
합 계	139	143	147	136	139	146	145

검찰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여수갑)

이영주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

비공개

2016. 5.

2016. 5.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유형년도	2016. 5.	정책실장	장교명	장관	차관	장관
유형년도	2016. 5.	차관	장교명	장관	차관	장관
유형년도	2016. 5.	차관	장교명	장관	차관	장관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

법무부

별첨 3 각 부문별 평가 취약요소

평가부문		취약항목	
▶ 입법 부진예상 과제		·유형 부문은 성과지표에 포함된 과제	
과제명	과제내용	성과지표	치명항목
입법 실시율	'법 소수승인' 개정안 (사건)을 제외한 '법소수' 결정 등 후 소회 계통(12. 2)	개항	입법 지연 (예산권 제도 개편)
중요하는 법규구축 (83번)	'다중이용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4. 12. 29) 제정안 있으나(15년) 시행이후 법적 기준 차등 후 소회 계통(12. 2)	개항	입법 미흡 (법제정률 제고) 등
사회통합의 인프라 체계 구축 (102번)	'2016년(14)연말 제정안 마련 (법무부가 요청) 총괄' 후 소회 계통(12. 2)	이전항목의 기간미만 (12. 개항)	입법 미흡 (중대추진 우수기관)
공민에게 대한 신뢰회복 (138번)	'인신보호법' 제정안 마련 (인신보호법 제정안) 후 소회 계통(12. 2)	이전항목의 기간미만 (12. 개항)	사회단체 이견 (안건추진률 제고) 등
공민에게 대한 신뢰회복 (138번)	'경찰청법' 개정안 (감사청과 감사 기간 단축) 후 소회 계통(12. 2)	개항	입법 지연 (법제정률 제고) 등
▶ 미완수 우려 과제			
과제명	과제내용		
공민에게 대한 신뢰회복 (138번)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 '국외 파견검사 단기적 감축 검·경간 합리적 역할 조정		

▶ **미완수 우려 과제**

과제명	과제내용
공민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138번)	법무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 외부기관 파견검사 단계적 감축 검·경간 합리적 역할 조정

국회의원(여수갑)

이영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시 수상한 검사파견

<최근 5년간 검사의 국정원 파견 일자>

2011.09.05		2013.04.23		2015.02.25		현재까지
2011.09.05		2013.04.23		2015.02.25		현재까지
	2012.07.26		2014.02.05		2016.01.27	현재까지
			2014.02.05	2015.02.24		

통상 파견기간 2년
통상 파견인원은 3명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일 자	주요 내용	일 자	주요 내용
2013.12.23.	법원, 검찰이 제출한 허릉시공안국 명의의 3개 문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서 발송	2014.02.17	중국대사관, 검찰제출문건 위조라는 사실조회 회신
2014.01.07	유우성 변호인단, 국보법상 증거은닉·날조 혐의로 수사기관 경찰에 고소	2014.03.1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4.02.04.	법원,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회신 독촉 발송	2014.03.14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국회의원(여수갑)

이영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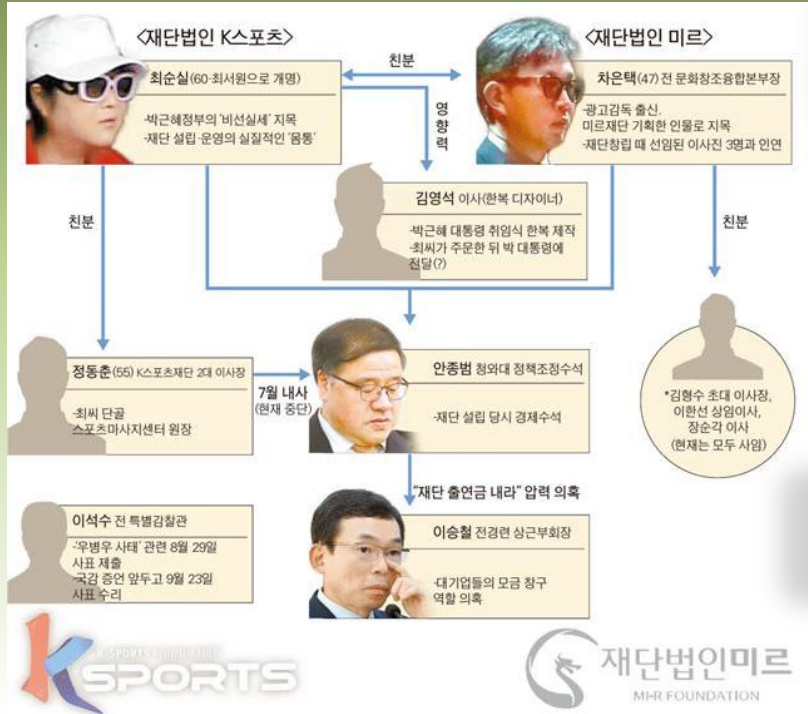
미르 ·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들

최순실 비리의혹

**체육특기종목 신설
입학 특혜**

**학칙 개정, 소급 적용
학사 특혜**

**대기업, 승마협회
전지훈련 지원**



차은택 비리의혹

**KT 영상광고
독점 수주**

**금융위 계획없던 광고
수의 계약**

**한국관광공사 사옥 리모델링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미르 · 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부 주도 모금

◆ **일요일에 전경련 연락받고, 다음날 어견지검 모인 출연기업**

◆ **재단이 납부기한까지 정해 기업에 출연금 독촉**

◆ **경총회장,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굴러가는 것 같다”**

◆ **佛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미르재단 "한국 정부가 주도한 재단" 소개**

미르 · K스포츠재단 출연액수

미르 케이스포츠 출연액수

단위: 원(괄호 안은 출연기업 수)

미르재단 기업출연금

K스포츠재단 기업출연금

자료: 미르재단 공시자료(2015년 말 기준)

자료: 조승래 의원실(2016년 9월 기준)



한겨레

2015년 8.15 특별사면 건설업체 중 미르·K스포츠재단 납부액

기업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미르	K스포츠
	약정액	납부액		
삼성물산	150억	10억	15억	-
지에스건설	150억	3억	5억 9천만	1억 9천만
대림산업	150억	3억	6억	-
두산중공업	150억	-	-	4억
계	550억	16억	32억 8천만	

온갖 탈·불법으로 '초고속' 재단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찾아가는 출장서비스와 초고속 허가

◆ 법원, 법인설립허가 전 '법인 등기' 신청 접수

◆ 기재부, 문체부 장관 직인없는 추천서로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검찰은 복지부동

◆ 권한없는 전경련,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후 통합재단 설립 계획 발표

◆ 미르재단, 무더기 문서 파쇄

◆ 기업들, 관련 문서 파쇄 및 이메일 삭제

◆ 한국토지주택공사, ‘MOU 국무회의 보고’ 파일 삭제

◆ 문예위, 회의록 국회제출시 경총회장의 ‘미르성토’ 부분 누락

기업의 출연금은 포괄적 뇌물수수의 '뇌물'에 해당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고 판단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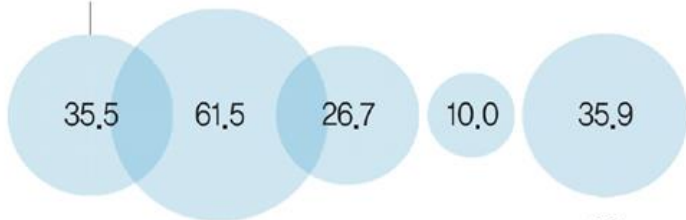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 20대 총선 당선자 기소 현황

[20대 총선 당선자 기소 현황]

당선자 기소율(%)



■ 전체 후보자(명)
■ 현역의원(명)



<출처 : 세계일보>

[비박·친박 선거법 위반 혐의 현황]

		비박	친박
기 소	강길부·권석창·김종태 박성중·박찬우·장석춘 장제원·황영철·김한표 이철규·함진규 의원	불기소	염○○ 의원
			김○○ 의원
		무혐의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계	11명	5명	

● 친박 실세들 김성회 협박 전화 녹취록 내용



○ 김성회 :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

☎ 윤상현 :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



☎ 현기환 :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에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 김성회 : 이게 VIP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



○ 김성회 : 그것이 VIP의 뜻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 최경환 :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뜻이고...



『친박 실세들의 김성회 협박, 조폭과 다른 게 뭔가?』

● 검찰, 친박 실세들 봐주기 수사



염○○ 의원

[재산신고 누락 혐의]

- 20대 총선 후보자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을 지난해 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



김○○ 의원

[허위사실 공표]

- 20대 총선 후보 경선 당시 “19대 총선 공약 70% 이상 이행했다”는 내용으로 **9만 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지상욱 의원

[금품 살포 혐의 수사관련 상부의 의도적 수사방해]

- 남대문경찰서 차모 경위는 14일 안행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상부의 지시로 제대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직속 상관은 수사과 팀장, 과장, 서울청 수사2계·수사과장

“친박 무죄, 야당 유죄”
외압과정 철저한 수사필요

●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내용

[강길부 의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

[이철규 의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 고등학교 졸업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블로그에 졸업이라고 공표”

[함진규 의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시흥시 부도설에 대한 기자회견 및 현수막 선동, 상대후보 인신공격”

[황영철 의원 : 금품 제공 혐의]
 “총선이 아닌 1년 전 금품 제공 혐의 기소, 1,2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

새누리당 (11명)



- 강길부
- 이철규
- 함진규
- 황영철
- 권석창
- 박찬우
- 박성중
- 김종태
- 장제원
- 장석춘
- 김한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외

국민의당 (4명)

현역의원 기소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 추미애
- 박영선
- 김진표
- 진선미
- 유동수
- 이원욱
- 김한정
- 강훈식
- 최명길
- 송영길
- 송기현
- 윤호중
- 오영훈
- 김철민
- 이재정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명)

<출처 : 세계일보>

[추미애 의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 동부지법·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내”

[박영선 의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 25명으로 줄였다”

[김진표 의원 : 기부 및 사전선거운동]
 “이천시장 쌀 홍보차 수원 산악회 회원에게 쌀 기증 및 소망 축언”

[진선미 의원 : 기부행위 혐의]
 “정책간담회 참석 간부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정상적인 용역 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1. 故 백남기 사건 관련자, 마지못해 소환조사?



장향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6.10.8. 소환조사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016.10.12. 소환조사

2. 故 백남기 사건 시위관련자 무더기 입건!

2016. 1월 기준

- 민주노총 소환자 : 한상균 위원장 포함 총 434명
(이 중 피의자 신분 소환자 총 423명)

- 구속 수감자 : 15명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3명
- 건설산업연맹 : 5명
- 공공운수노조 : 2명
- 공무원노조 : 1명
- 금속노조 : 4명

3. 상황속보 고의파기 의혹, 공공기록물 시행령 위반!

2016. 5. 9, 경찰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 사후 조치 사항

이 사건 집회시위의 현장 지휘관인 피고 前제4기동단장은, 당일 20:30경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한 제4기동단 기동장비계장이 피고 前제4기동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원고 백남기의 부상사실을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전에는 전혀

을 제24호증 상황속보 19보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20:30 기준으로 작성된 19보까지)에서도 언급이 없었고(을 제24호증 상황속보 19보), 21:00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서 비로소 언급(을 제24호증 상황속보 20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을 제24호증 상황속보 20보

3. 상황속보 고의파기 의혹, 공공기록물 시행령 위반!

▣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4. 일베 주장 '빨간우의 타격설', 영장에 인용!

백남기 농민 병원자료 압수수색영장(2016. 9. 6)

압수수색검증영장

번호	2016-2
상	주민주권
의자	주민주권
한글자	권 나
수색, 검증할 는 사유	별지
적, 검증할 구, 인쇄, 물건	서울 광 진을 보
압수할 물건	별지

피의자들은 병모하여, 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해성 경찰장
파인 살수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하는 등 직권
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

○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해자 백남기가 2015. 11. 14. 민중총궐기
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급성 의상성 경리과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명 상태인 사실은 인정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위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제4면 461쪽 수사보고 및 영상
CD)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
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2015.11.14)

5. 오류 있는 사망진단서, 의료계는 “수정” 주장!

지난 9월 25일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 퇴원기록

SNUH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등록번호	47543722	성명	백남기	성별/나이	남 / 69세
------	----------	----	-----	-------	---------

퇴원기록 : 2016-09-25
작성과 : 신경외과
수진과 : 신경외과

입원일자 : 2015-11-14
입원진료과 : 신경외과
퇴원진료과 : 신경외과

퇴원(수)진단명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

SNUH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등록번호	47543722	성명	백남기	성별/나이	남 / 69세
------	----------	----	-----	-------	---------

양후계획 >
Description
사망

퇴원장소 : 영인실
결과 : 사망

백남기 / 백선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 친필서명 기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